

#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3.04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 Contents

---

- 01 "글로벌 탄소규제 대비" 섬유기업 탄소설비 교체에 최대 1억원 지원 p.1
- 02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기로 p.2
- 03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방지관세 최고 33.43% 부과 p.3
- 04 할당관세 악용 차단 "보세구역 반출지연·부정추천 업체 집중단속" p.4
- 05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p.6

1

## “글로벌 탄소규제 대비” 섬유기업 탄소설비 교체에 최대 1억원 지원

### 저탄소 설비·측정 인프라 지원... 영국 CBAM 동향도 점검

정부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섬유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전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3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비 2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노후 설비를 고효율·저탄소 설비로 교체하거나,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려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섬유산업은 원단 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고온·고압 공정을 다수 사용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패션기업과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원정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 감축과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섬유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해 2027년부터 원료·부품 정보와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등 공급망 전 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70%, 대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탄소감축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되며, 감축 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r.go.kr](http://www.moti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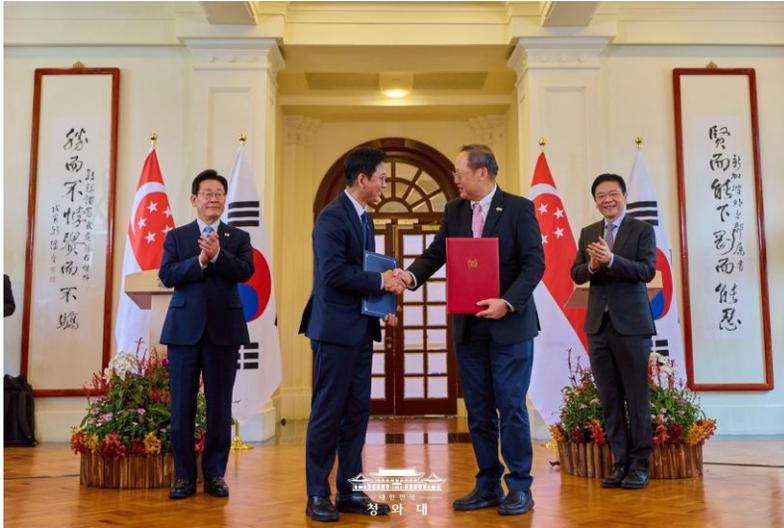
한편 영국도 EU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관리는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월 10일 CBAM 관련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초안은 제도 이행 방식과 부담액 산정 구조 등을 구체화했으나,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정기구의 검증기관 참여를 허용해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EU와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이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에 불리한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넘어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이 새로운 수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가 먼저 도입되는 업종부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기로

### 4개 분야 FTA 개선 사항 합의, 소형원전 개발 MOU 체결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민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양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싱가포르는 ASEAN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발효 20주년을 맞아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의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4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 수립,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 기반 조성, ▲통관 절차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 분야 행정 협력, ▲항공기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각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SMR 협력 MOU'를 체결해 소형원전분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소형원전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며 싱가포르 역시 AI 데이터 센터 확대 및 탄소중립 등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번 MOU 체결을 통한 실익이 기대된다.

### 3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방지관세 최고 33.43% 부과

#### WTO협정에서 규정한 가격약속 합의로 무역 충돌 방지

정부는 일본 및 중국산 합금강 열연제품에 최대 3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2024년 기준 10조원 규모의 국내시장에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 일본·중국 제품들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2025년 9월부터 부과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산에 최대 33.43%, 중국산에 최대 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JFE 등 3개 사, 중국 바오산 등 6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의 수락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분기별 가격 조정 및 이행 보고를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때 해당 수입 물량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및 가격약속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의는 덤핑을 제거하면서 수입산 열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산업 전반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통상 마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구분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덤핑방지관세율	가격약속 수락 여부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3.43%	약속 수락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1.58%	약속 수락
	그 밖의 공급자 Tokyo Steel Manufacturing Co., Ltd.	32.66%	약속 수락
	가격약속 수락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	32.66%	-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관계사	29.37%	약속 수락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관계사	28.16%	약속 수락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33.10%	-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33.10%	-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33.10%	-
	그 밖의 공급자 Hebei Yanshan Iron And Steel Group Co., Ltd.	33.10%	약속 수락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33.10%	약속 수락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33.10%	약속 수락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33.10%	약속 수락
가격약속 수락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	33.10%	-	

(출처 : 산업통상부)

4

## 할당관세 악용 차단 “보세구역 반출지연·부정추천 업체 집중단속”

고물가 기초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특별 단속과 고강도 수사까지 예고하면서, 수입 단계부터 물가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관세청은 2월 6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자료(2026년 1월 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가격은 54.6% 급등했고, 설탕은 24.7%, 건조 고사리는 23.4%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추천 자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면서 정책 효과를 왜곡해왔다는 것이 관세청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하고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물가 안정품목 신속통관의 일환으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111건, 1억 6,000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해,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반출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 물품도 반출을 독려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실시해, 할당세율을 추천·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내에 시중유통)경과 후 반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과정에서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추천을 받아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

(단위: 건)

구분	미표시	부적정 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허위표시	기타	합계
시정조치	1,808	242	48	2	39	11	2,150
검찰송치	-	-	4	2	6	-	12
합계	1,808	242	52	4	45	11	2,162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 할당관세 악용 차단 “보세구역 반출지연·부정추천 업체 집중단속”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물가관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해, 국민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원유 등 87개 품목에서 아보카도, 인스턴트 카레, 캐슈넛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9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매주 분석·선정해 소관부처에 제공,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을 선별해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은 고강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넘길 경우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관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세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5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EU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공급망 단위 환경규제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일반 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 트랙은 70% 이내고,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과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등은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한다.

지원트랙별 대상 및 규모

지원트랙	지원(신청) 대상	규모	보조율	비고
일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95개사 내외	50% 이내	일반트랙,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고도화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 에너지 절감형·신재생에너지형 설비와 배출량진단형·공 정최적화형 설비 중 각각 1개 이상을 병행 도입*하는 기업	15개사 내외	70% 이내	최근 5년간 동일 트랙 내 3회 초과 지원 불가

\* (예시) 인버터형 공기압축기(에너지 절감형)와 모니터링 설비(배출진단형) 병행 도입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비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신설했다.

유관기관 사업 연계, 원가계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가능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 공정 최적화형(AI기반 제어 시스템 등), 배출진단형(모니터링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폐기를 열분해시설 등) 총 4개 유형으로 체계화한 것도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mss.go.kr)에 게시된 사업공고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가능하다.